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

제출년월일 : 2000. 4.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시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하고, 서민주거안정대책과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 등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 국가유공자 개인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

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안 제4조)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포함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감면 : 재산세 1.5/1000, 도시계획세 1/1000의 세율로 과세하던것과, 종합토지세 50% 경감하던것을 전액면제함(안 제10조)

※ 재산세 0.15%과세, 종합토지세 50%경감 → 전액면제

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12조)

※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주택 → 2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감면

마.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감면폐지(안 제15조, 제16조)

※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 폐지,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삭제

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신설 : 과밀 억제권 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 (안 제23조의5)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표준안(1999. 10. 1 도세정 13400-1549, 1999. 11. 11 도세정 13410-1930, 1999. 12. 21 도세정13400-2348, 2000. 1. 13 도세정13400-10041, 2000. 3. 8 도세정 13400-10364) 공문사본 각 1부.

나. 관련법령(발췌)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 본문중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항중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를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동조 제5항 단서”로 하며, 동조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의4 다음에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②----- ----- ----- -----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감면신청하는--			

현	행	개	정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 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 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 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 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 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u>등록을 한 자</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 <u>등록을 한</u> ----- -----

현행	개정안
<p>4. <생략></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p> <p>-----</p> <p>-----</p> <p>-----</p> <p>-----장애인직계존·비속, 장애인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p> <p>-----감면신청하는-----</p> <p>-----</p> <p>-----</p> <p>-----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p>

현	행	개	정	안
1 ~ 4. <생략>		정한다.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② <현행과 같음>		
사업의 <u>허가</u> 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1. -----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 <u>등록을 한 자</u> ---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		-----		
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		
되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u> 를 받		3. ----- <u>등록을 한</u>		
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		
증명되는 자동차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u> 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		감면) <u>교육기본법</u> -----		
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		-----		
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		-----		
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		-----		
제한다.		----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u>다음</u>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u>다음</u>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u>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u>		

현	행	개	정	안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			
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u>	<u>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u>	4. <삭 제>		
<u>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u>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	-----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			
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	-----			
축물의 사용승인교부일이전에 교부받	-----			
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			

현	행	개	정	안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	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2세대이상---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	하어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			
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		
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	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		
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한 감면)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			
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	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농수산물가공		
		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업자-----		

현	행	개	정	안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		
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	-----		
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②-----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	-----		
세법시행규칙 【별표3】 에서 정하는 업	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	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			-----<단서 삭제>
밀역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	조의2	-----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동법 제28조의5		-----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

현	행	개	정	안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제15조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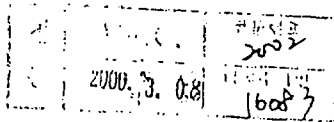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를 추징한다.</p>	
<p>제16조(주차전용토지에대한감면)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p>	<p>제16조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 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 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 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 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 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2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경상 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 보증재단----- -----		

현	행	개	정	안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u> 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는 면제한다.				<u>신용보증재단</u>
제23조의3(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영주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u>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u>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u>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제23조의3(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의3(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u>
				<u>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동조 제5항 단서</u>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u>

현 행	개 정 안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 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u><신 설></u>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 제23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 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 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의 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 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 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현행	개정안
	<p>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p>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관인생략
"위대한 경복 함께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 ☎ (053)950 - 2311 /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진순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원찬

문서번호 세정 13400-10364

시행일자 2000. 03. 08 (20년)

공개여부 공개

발 용 시장, 군수

창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람	과 장	지 시		
접 수	일 자	결 재	담 담	76246
	시 간	공 합		
	번 호			
처 리 과	세 무 과			
담 당 자	홍 라 인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른 시,군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 - 210(200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 3. 1. 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 됨에 따라 시,군세감면조례 조문 내용중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변경에 따른 시,군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나
3.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감면조례(설립근거 및 명칭)을 개정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조례 표준안 1 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 ----- ----- ----- ----- ----- ----- 신용보증재단----- -----

404
16.85

관인생략

"위대한 강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950 - 2311 /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경균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관

문서번호 세정13400-10041

시행일자 2000.01.13 (3년)

공개여부 공개

발 용 시장, 군수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임	사무관	박현규	지 시	
일 자	일자	2000. 1. 13	결 재	시정담당
점 수	시간		공 람	247
변 호	번호	247		
처 리 과	처리과	세무과		
담 당 자	담당자	최현관		
심 사 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수정사항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 - 14(2000.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세정 13400 - 2348('99. 12. 21)호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안)중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당초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 끝

2000.1.13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박경균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당초 개정조례(안)	수 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9981

관원생략

경상북도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동 1445-3 / 전화 (053) 950-2311 / 전송 (053) 950-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정균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 - 22448

시행일자 '99. 12. 21(30년)

(경유) 홍재

발 음 시장.군수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장	지
접	임	결
수	번	재
처	리	공
담	당	람
집	사	사
자	자	일

제 목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232('99. 12. 3)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틀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군별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시.군세 제15조 및 16조) 폐지는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지시기·폐지대상 및 과세전환율을 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현행대로 존치키로 한 조례와 그 사유를 숙지하여 해당 조례의 해석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 1부

2.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글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경 세정회계과장 박정균

26

시.군 지방세 감면조례 담당자 귀하

지방세 감면조례 첨부물은 핸디오피스 시.군연락방에 게시되어 있
니 유인하여 사용하시기 함라며 아래사항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도세감면조례

제30조 ⇒ 제 29조의6

시.군세 감면조례(0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삭제)

아울러 도세 및 시.군세 알반조례도 개정해야 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비필

地方稅 減免條例 整備(改正) 計劃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I. 條例 改正의 必要性

-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
 -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
- 불필요한 감면 축소
 -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
- 자치단체 요구 및 민원 해소
 - 감면조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종합적으로 검토
- 규정의 명확성 제고
 -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

II. 推進·過程

- 총22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하여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3차)을 거쳐
 - 개정시안을 마련함
- 각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
 - 4건 : 폐지
 - 7건 : 제정 및 개정
 - 7건 : 현행존치
 - 4건 : 별도검토기로 함

〈非課稅·減免 現況〉

○ 비과세·감면 총규모('98) : 2조203억원(징수총액의 11.7%)

-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 : 1조 2,096억원(59.8%)
- 조례상 감면 : 7,298억원(36.1%)
- 조세특례제한법등 감면 : 809억원(4.1%)

○ 전년대비 감면규모 증가율 : 12%

연도별	'97	'98
· 감면규모	18,039억원	20,203억원
· 전년대비	(△16.3%)	(△12%)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뭇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하여----- -----감면신청하는----- -----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1~4. (생략)

③ (생략)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생략)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생략)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등록을한자-----

2.(현행과 같음)

3.-----등록을한-----

4.(현행과 같음)

제4조-----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
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
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
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면신청하는

-----다만, 장애
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
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
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
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4. (헌행과 같음)

② (헌행과 같음)

1. -----
-----등록을한자-----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생략)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생략)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에 대한 감면)교육법에 의한 학
교를 설치·경영하는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
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
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
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2.(현행과 같음)

3.-----등록을한

4.(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기본법에--

제10조-----

-----문화재등

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
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
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
정한다.

1·2·3 (생략)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
에 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
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
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
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
획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
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
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임대주택법제12조규정에-

1·2·3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
에 대한 감면)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
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 -----
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 -----
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
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삭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
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
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
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
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
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와
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삭제)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

----- 동법 제28조의5의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내 <삭 제>
한 감면)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
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
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
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
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
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
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
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
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
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
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삭 제>

년)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
금액×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
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
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0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
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
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
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
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
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
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
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0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
한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
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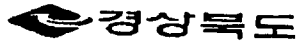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항에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
항에 -----

전	FAX	8987
문	년 월 일	1999. 11. 11
	시/군/구	1608

40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053) 950-2311 / 전승(053) 950-2319
 새정회계과 과장 박정균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10 - 1930

시행일자 '99. 11. 11 (3년)

(경유)

받 음 시장, 군수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다	지	
람	수	시	
접	원	결	답
수	자	재	수
번	간	공	
호	PP. 11. 11	람	
	4218		
처	세		
리	무		
과	과		
담	총		
당	라		
자	안		
심		심	사
사		사	일
자			

제 목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 통보

드세담당자

1. 행정자치부 세제 13410-1018('99. 11. 8) 호와 관련입니다
2.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 군별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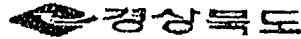
전경 새정회계과장 박정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공공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	-----
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
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
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	-----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
현재 <u>5세대</u> 이상을 임대목적에	----- <u>2세대 이상</u> -----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	-----
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	-----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	-----
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	-----
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	-----
시계획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	------(단서 현행과 같음)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전	문	7283
문	문	1608

42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053) 950-2311 / 전송 (053) 950-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정균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 - 1549

시행일자 '99. 10. / (3년)

(경유)

발 용 시장. 군수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상	지
접	일	결
수	차	재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실	사	자

제 목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727 ('99. 9. 28)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불입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시고
3.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동안 50%경감)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입 :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정경 세정회계과장 박정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〇〇조(법인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한 감면)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 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 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 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 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 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 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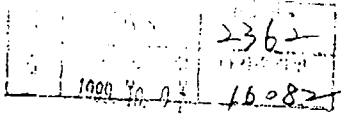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
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
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
상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46

업무연락

수 신 : 시.군 부과담당

발 신 : 경북도 세정과 최현찬

제 목 :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 변경사항 통보

1. 세정 13400-1549 ('99.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의 00조 제1항 제2호 "공장 또는 공사.." 를 "공장 또는 본사..."로 수정되었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산출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산출기준 1 부

수령필 후

경상북도 세정회계과 최현찬 

관련법령(발췌) 목록

- 지방세법시행규칙 : 제114조의2, 115조
- 임대주택법 : 제12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제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28조의2, 제28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1조의5제3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6조

관 련 법 령(발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법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차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99. 1. 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등을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3. 삭제<97. 3. 7>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8. 삭제<97. 12. 13>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점도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업매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①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 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도시설설치승인, 제도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등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5(조세의 추정) ① ~ 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레 명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17호(2000. 1. 29)게재
- 예고내용 : 별첨과 같음
- 예고기간 : 2000. 1. 31 ~ 2000. 2. 1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10호
- 의안명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2. 제정이유

시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하고, 서민주거안정대책과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 등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
- 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안 제4조)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포함
-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감면
재산세 1.5/1000, 도시계획세 1/1000의 세율로 과세하던것과, 종합토지세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면제함(안 제10조)
※ 재산세 0.15%과세, 종합토지세 50%경감 → 전액면제
- 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12조)
※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주택 → 2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감면

마.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감면폐지(안 제15조, 제16조)

※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
폐지,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삭제

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신설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안 제23조의5)

4. 검토의견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감면하던 재산세·종합토지세를 → 국가유공자
개인 및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종합소득세를 감면

○ (안) 제4조(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만 감면
→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감면에 포함.

○ (안)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 재산세 1000분의1.5, 도시계획세 1000분의1의 세율로 과세하던것과,
종합토지세 50% 경감하던 것을 → 전액감면

○ (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주택 → 2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감면

○ (안)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감면 폐지
 -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 폐지
- ※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 면제 → 삭제(부과)

○ (안) 제23조의5 신설(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면제)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재산세 ·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

본 조례내용을 검토 한바

- 시세감면조례중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에 중점을 두고
- 세재지원이 불요한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감면하던 것을 과세 전환하며
-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4.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